

政治外交學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李 鍾 殷
(國民大 政治外交學科)

1. 政治外交學科의 發展過程

근대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전통은 그렇게 오래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근대적 정치학의 연원을 동양 전통 사회였던 韓末에서 찾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였던 일제가 權力批判의 학문일 수도 있는 정치학을 장려하였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일제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民族意識이 정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다.

해방 후 학제상의 개편을 통하여 각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가 설치되었다. 해방과 독립이 희망찬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정치학에 대한 열기는 높았다. 당시의 정치학 교육은 미국식으로 교과과정을 분류하였으나, 교육의 실제 내용은 일본 학계를 모방한 것이 많았다. 歐美의 정치학을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번역·소개하던 노력조차도 6·25 사변으로 위축되었다.

6·25 사변이 끝난 후에 反共—邊道로 흐르게 되자 해방 후에 일어났던 맑스주의적 정치 이론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정치학은 주로 미국의 정치학을 받아들이면서 각 대학에서 연구되고 가르쳐졌다. 韓國政治學會報의 창간호는 1959년에 나왔으며 1964년에는 韓國國際政治學會가 창립되었다. 해방 무렵에는 民族國家

건설에 대한 열망이 정치학도를 매혹시켰다고 하면,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후진국의 발전이라는 과제가 정치학자의 뇌리를 휩쓸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치(외교)학과와 발전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현정 40년이 보여 준 파란만장한 한국 정치사와 함께 정치외교학과도 희비를 같이 하였다. 1962년에 대학 입학 정원을 13만에서 8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이 때에 많은 대학이 정치외교학과를 행정학과나 야간 학과로 전환하였다. 심지어는 10여년간 폐과되지 않을 수 없었던 대학도 있었다. 반면에 뒤늦게 개설된 행정학과는 현재 학과 수나 학생 수에 있어서 정치외교학과를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현재로는 41개 대학이 42개의 정치·외교학과를 두고 있으며, 1,986명의 신입생이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고 있다.

2. 政治學教育의 問題點

정치외교학과는 40여년간에 외형적으로는 큰 변모를 겪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수 확보율이 저조하여 교수는 수업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연구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과학적 지식이 방대하게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여건이 구태의연하다는 사실

이 정치학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도서관, 전산실과 시청각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을 적절하게 교수할 수 있다.

정치학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혼선을 가져오는 것은 졸업생의 취업이 부진하다는 사실이다.

대개의 기업체가 정외과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입사 필기 시험 과목에 정치학을 요구하는 기업체가 거의 없으며, 정치외교학과는 자격 대상 학과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취업난 호소는 지방 대학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한 지방 대학은 졸업생 취업률이 연 5% 미만인 것을 밝히고 취업률의 부진 등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시위를 하고 교수에게 도전을 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기업은 정외과 학생보다 경상계 학생을 선호하며, 경상계 학생들도 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기업체나 정외과 학생들이 경상계 학생에 비교하여 서로 메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외과 학생들이 대량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기업체뿐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선 이제까지의 정치학 교육이 기업체 취업에 적합한 지적 능력,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인품 함양에 노력하였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비단 기업체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 교육시켰는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아카데미즘에로의 편향된 정치학 교육을 하는 한에는 정외과 학생들에게 취업 선택의 폭을 넓혀 주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직업 교육을 강조하게 되면 교과 과목, 교수 방법과 교수 내용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카데미즘에로 편향된 정치학 교육이나마 올바르게 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학문이든지 하나의 학문으로서 보편적인 知識의 確立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치학이 사회과학 일반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물론 더 나아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과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현대의 정치학은 20세기 미국에서 발전된 정치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세기의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전통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현상은 탐구자의 주관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이 사회 현상은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가정이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현대 정치학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처럼 社會科學의 단지 한 분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증주의는 사회과학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이며 이에 대한 認識論的 檢討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정치학이 다른 학문과 연관되는 바를 올바르게 인식하여야만 교과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치외교학과는 정치학을 대체로 ① 한국정치론, ② 정치학 방법론 및 이론, ③ 비교정치론, ④ 국제정치론, ⑤ 정치사상 및 철학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한국 정치론은 미국에서 미국정치론에 해당한다. 미국 대학에서 개설되는 미국정치론 과목 수에 비하면 세분되어 있지도 않고 한국정치론 분야는 과목의 수가 적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 정치학을 이해하려는 데에 급급하여 한국에서 특유한 한국 정치를 분석·비교하려는 학문적 자성이 적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학이 한국의 특유한 정치학 방법론이나 이론을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치학이 한국 정치 현상이라는 또 하나의 연구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치의 특수성은 별개의 연구 방법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制度圈 政治學’과 ‘在野政治學’ 혹은 ‘講壇政治學’과 ‘地下政治學’의 대립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이러한 대립이 나타나게 된 증거로 방법론이나 이론 분야의 과목을 전공 필수로 과하지 않는 대학이 많으며, 비교정치나 국제정치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

을 수 있다. 정치학은 정치 현상에 대한 산만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이론적 바탕 위에서 정치적 지식을 넓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정치학은 이론적 바탕 위에서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정치철학과 정치과학의 관계에 대한 오래된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도 이 분야에 대한 전공 과목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정치학이 발전할 수 있는 自生的 能力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방법론이나 한국정치론에 비하여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地域研究(area studies)가 비교정치학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를 비교·분석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비교·분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초가 다져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도, 행태와 문화의 연구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다진 연후에 지역 연구를 하는 것이 상례인 것 같다.

비교정치와 지역 연구간의 대립적인 시각을 이처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比較政治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는 국제정치론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른 분야보다도 국제정치학 분야가 필수 과목으로 많이 지정된 것을 보아 정치학 내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해방 후에 정치학을 연구하면 自主獨立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정치학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국제 정치나 외교를 연구하면 약소국의 설움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열망에 부응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도 국제정치학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학은 국제 정치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제정치학이

適實性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국제정치학의 교과목이 이러한 점에서 부족한 감이 있다. 후진국의 입장에서 국제 정치 현실을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이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정치론과 외교사 연구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적 시각과 방법을 정리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학문이어야 그 학문이 적실성이 있고 생동감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 사상이나 정치 철학만큼 생동감이 없고 개설하는 이유조차도 잘 인식되지 않은 분야도 없을 것이다. 英美에서는 행태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정치학이 우세하여서 정치 철학은 죽었다고 한때 표현된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이유에서 정치 사상이 경시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과학적 정치학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사상이 정치학 내에서 왜 필요하고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에서 개설된 정치 사상 교과목 중에서 현실 문제와 연결시켜 주는 교과목은 별로 없다. 예를 들자면, 地價가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한 한국 사회를 감안한다면 ‘所有란 무엇인가’ 혹은 ‘平等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정치 사상 과목도 필요할 것이다.

현실, 문제에 대하여 철학적인 해석을 내리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 사상 과목이 죽은 학문처럼 여겨지기도 하겠다. 달리 생각해 보면, 이는 政治思想과 政治科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정치가 갈등 해소 과정이라고 보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은 개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정치 이론과 현실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목표로 하는 정치 과학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있기 마련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 같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학 교과과정의 전반에 걸쳐서 정치·경제·철학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사

회학, 정치경제학 등 통합적인 研究定向이 가져다 주는 정치학 자체의 正體性(identity)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논의한 분야에서 보면, 정치 사상과 정치 이론 분야 중에서 규범적인 이론을 제하면 다른 모든 분야는 사실상 행태주의나 과학적 정치학이 축적하여 온 지식 체계에 속한다. 행태주의적 정치과학은 정치적 인간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이해·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화 시대를 맞아 많은 선거를 겪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치 문화에 맞는 선거 캠페인을 가르치는 과목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을 찾기 힘들다.

이것은 이제까지 외국의 정치학의 이해에 급급하여 우리의 정치학을 발전시키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실성이 결여된 정치학 강의에 급급하다 보니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시키려는 노력도 소홀하게 된 것 같다. 적실성이 없다는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정치학이 社會批判的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 정치학에 대립적인 지하 정치학이 생겼다고 보겠다. 어떻게 보면 정치학은 권력의 본질과 추이를 규명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학문이다. 학문의 본질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정치학이 사회 비판적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外國 政治學界의 動向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학은 일방적으로 미국 정치학에 의존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정치학적 지식의 선진성이나 새로운 어느 만큼 빨리 미국 정치학에서 발전된 지식이나 방법론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정치 생활에 진정으로 기여한 바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만한 思考의 유연성도 능력도 결여하였다고 하겠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전반적인 낙후성과 더불어 학문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된 사실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치학은 정치학을 사회과학의 독립된 한 분야로서 경제학과 사회학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에서 특색을 찾을 수 있다.

方法論上의 個人主義(the 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모든 과학의 方法論的 統一性(the methodological unionism)이 정치학의 전문성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전문 영역의 의미도 세분화된 探究對象에서 찾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의 정치학 교과과정은 미국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비슷하다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한국에서는 학부 4년 동안에 세분화된 정치학 분야 전부를 배우도록 교과과정이 짜여져 있다. 이에 비하여 원래 사회과학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유럽 대학은 물론이고 각 학문 분야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대학에서도 세분화된 정치학 분야는 학부 3학년 이후에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학부가 미국의 대학원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미국 정치학 자체도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변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人文科學的 研究, 즉 철학·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의 모든 분야에—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게임이론 등 형식 이론의 경우에도—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과 이와 더불어 정치경제학 연구의 발전은 정치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이었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學際的 研究를 강조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분위기에서 미국 정치학계가 최근에 이르러 유럽의 정치학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학계도 미국 학계가 그렇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차원에서 정치학 교육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와 동독에 있어서의 정치학 연구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정치학은 미국의 정치학과 대비되기 때문에 소개하며, 동독의 정치학은 地下政治學이 대두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 비추어 공산권 정치학의 한 예로서 시사받을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처럼 대학에 정치학과가 있어서 정치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프랑스의 실정이다. 법학과, 철학과, 역사학과와 사회과학과의 교수들이 정치학에 해당하는 강의를 맡고 있다. 대학에 못지않게 연구소가 프랑스에서는 정치학을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정부, 정당, 여론과 선거 행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구 분야가 보다 다양하여져서 언어학자가 ‘政治的 談話’를 연구하고 철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까지도 근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논의되는 문제는 많아지고 학자들은 접근 방법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方法論的 個人主義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회 경제 구조가 개인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선거 행태의 연구뿐만 아니라 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自由意志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셸 크로지에는 행정 제도의 작동 양태는 권력 구조의 결과이며 이는 법적·제도적인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을 밝혔다.

국제 관계나 외국 정치 체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국의 내부 문제와 외부 문제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을 근자에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선거 행태 연구에 전통적으로 강하였던 것도 사회 경제적 지위가 시민의 정치적 견해를 결정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원래 프랑스는 맑스주의적 左派와 보나파르르즘적인 右派로 나누어져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로 맑스주의가 퇴조하였다. 소련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전체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외, 버어크, 콩스탕, 기조, 베버의 작품을 재조명하고, 아렌트, 알튀세르와 데리다, 그리고 뽕띠, 아롱 등이 행한 연구가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프랑스는 이제서야 自由主義를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된 것 같다.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대학과 아카데미가 정

치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中長期 연구 계획을 ‘Academy of Social Science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SED’의 정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SED가 연구를 맡은 대학과 아카데미를 감독한다.

東獨의 정치학자들이 英美의 의미도 간단한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를 위한 ‘정치학 국가위원회’를 만든 시기는 1974년이다. 알다시피 東獨의 정치과학은 맑스, 엥겔스와 레닌의 교의에 기초를 두어 왔다. 그런데 등독 학자 자신이 다음과 같은 自省의 변을 표현하고 있다.

“맑스주의적 접근법을 수용한다고 해서 다른 접근법은 모두 非科學的이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맑스주의 정치과학은 다른 학파를 비판해 왔다. 공산권 정치학자는 非맑스주의적 이론과 방법을 非科學的이라고 거부하기도 하였고, 서구 정치학자도 맑스주의 정치학에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축적하여야 하는 데에는 서로 공개적 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넓혀져 가고 있다. 등독 학자가 서구 학자에게 보여준 태도에 반성할 것이 많이 있다. 단적인 예로 동독령에서 태어난 베버에게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식의 전환을 기하면서 연구 대상의 범위도 넓혀 왔다. 예를 들자면 1970년대 이후로 등독의 학자들은 미국의 역사, 외교 정책과 정치 체제를 연구하여 왔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할 수 없었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하여 생태학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의 學際的 協助를 필요로 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4. 結 語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이며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知的 傳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정치학이라고 하겠다. 이 정치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정치(외교)학과와 현황과 외국의 동향을 이제까지 살펴 보았다.

논의는 정치학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며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간단히 말하면 학부 교육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치학이라는 지식의 專門性과 實用性이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며 양자의 조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관건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왜 한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自省이 없이는 한국 정치학의 획기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성이 있어야만 정치학과가 꺾고 있는 일련의 학문 내·외적 난관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具施漢, “比較政治學 20 年の 反省”, 한국정치학회보, 제 2 집, 1967, pp.7~75.

金桂洙, “정치외교학과 학생에 대한 능력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12집, 1978, pp.189~201.

文張益, “정의과 학생들의 태도 분석”, 전계서, pp.203~215.

李宗范, “정의과 학생들의 이미지 분석”, 전계서, pp.217~234.

尹謹植, “사회비판적인 정치분석과 한국정치학”, 전계서, 제13집, 1979, pp.249~250.

Nicole de Montricher, “French Political Science”, *PS*, Vol.22, No.1, 1989, pp.146~148.

Thomas L. Pangle, “Political Theory in Contemporary France”, *PS*, Vol.20, No.3, 1987, pp.999~1003.

William T. Bluhm, et al., “Political Science and the Humanities”, *PS*, Vol.8, No.2, 1985, pp.247~259.

Karl-Heinz Roeder, “Political Science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S*, Vol.22, No.3, 1989, pp.753~758.